

사고 부르는 '우회전 참변' 여전... 알고도 안 지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3년

제도 시행 전 대비 교통사고 건수·인명 피해 그대로
“준법자에 경직 난무…신호등 확대·의식 변화 절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한다.

단,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따라 주행해도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차자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벅칙금과 함께 별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1월 개정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8시 14분

광주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는 60대 A씨가 물던 17t 화물차가 횡단 중이던 B양(17)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공장 앞에서 잠시 정지한 뒤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34분에는 목포시 주교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 운전사 C씨가 우회전하다 70대 여성 D씨를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D씨는 끝내 숨졌고, 버스 운전사 C씨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상으로도 제도 도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262건 (사망 4명·부상 264명), 2024년 231건

(사망 5명·부상 232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21년(238건·사망 7명), 2022년(244건·사망 3명)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높고, 인명 피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속 실적 역시 둘째 날짜이다.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 건수는 2023년 765건에서 2024년 51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12건으로 늘었다.

도로의 현장 상황은 이런 통계의 현실을 예상해 드리낸다.

광주 동구 서석동 일대 교차로를 확인한 결과,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그러나 일시 정지한 차량 뒤에서는 경적이 연이어 울렸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우회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북구 동운고가 입구(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동운고가 방향)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

운전자 안모씨(36)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여전히 긴장하게 된다”며 “뒤자의 경적 때문에 일시정지를 망설이는 운전자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호체계 개선과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운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남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오늘 재개

주민 교통편의 증진…노선 변경·하루 5차례 운행

광주 남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9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기존 버스 운행 노선 정비와 구형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9일부터 운행한다.

새롭게 바뀐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운행 동선이 연장됐다. 교통 기반 이 축약한 승촌동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승촌 파크골프장까지 운행 구간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남구청에서 출발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운행했으나, 이번부터는 남구청에서 승촌 파크골프장까지 셔틀버스가 다닌다.

공공시설 승하차 지점도 대중교통 환승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수 바다 지킨다” 정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여수 국동항을 방문해 다종이용선박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수바다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해양 이용 증가에 대비해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광주여대, 2년 연속 ‘최우수 교원양성기관’

비수도권 유일 전 유형 ‘A등급’…“최고 역량 입증”

광주여자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여대는 8일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비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양성과 정 전 유형(교육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5주기 역량진단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전 과정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6주기까지 2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달성한 것으로, 대학의 교원양성 체계와 교육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5일

김인수 기자 joinus@

60대 주범 징역 3년·70대 공범 징역 8개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씨(70대)도 앞서 상고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

반면 B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이 참작돼 1심에서 감형(징역 1년) 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정치적 목적의 조작이라는 주장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경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입춘 지났는데…광주·전남 ‘한랭질환’ 급증

전년比 37.5% 늘어 22명…장성·광양 등 3명 사망

고령층 경고음…내일까지 영하권에 체감온도 ‘뚝’

입춘(立春·2월 4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역 민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한랭질환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오는 10일 까지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보건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

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모두 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명)보다 37.5%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 4명, 전남 18명이며, 전남에서는 이중 3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남에서 한랭질환 사망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 양상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장성에서는 80대 여성 1명이 한랭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신고됐고, 이는 올겨울 지역 내 첫 한랭질환 사망 사례로 분류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명)보다

으로 육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한랭질환 추정 사망으로 판단됐다.

한랭질환은 주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등상, 동상(혈관 손상 염증)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중 약 60%가 고령층으로 추정돼, 이들은 한랭질환으로 사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한랭질환자는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전국 한랭질환자는 301명으로 전년 동기(247명)보다 21.8% 늘었고, 사망자 역시 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173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발생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가 23.9%로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도 길가와 주거지 주변, 집 등 일상 공간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강추위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이 확인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10도, 낮 최고기온은 3~9도에 머물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5~9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기와 강한 바람이 겹치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7~8일에는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면서 도로 결빙에 따른 크고 작은 낙상·교통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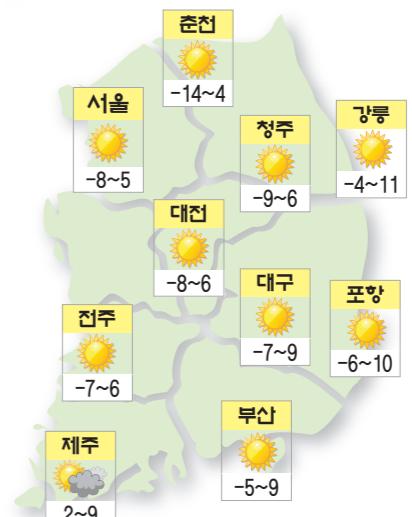
질병관리청은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간대에 한랭질환 위험이 가장 크다”며 “고령층은 외출을 삼가고, 주변 가족과 이웃이 안부를 살피는 등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물 07:25 일몰 00:40
해금 18:08 일몰 10:58



광주	6~7
목포	4~5
여수	5~8
순천	5~8
구례	6~8
제주	7~11
제주 바다	2~9

“근로계약서 ≠ 면죄부”

마녀피를 썼기 때문에 범죄를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쟁금 1억400만원을 분산 이체했고,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시정만으로 면죄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채용, 계약서에 회사 주소·임금·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하면 불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정의. 이어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